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5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Designing Gender Governance in Jeonbuk :
Development of a Framework and Strategies

전희진 이주연 전아람 최지훈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연구진 소개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3-05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Designing Gender Governance in Jeonbuk :
Development of a Framework and Strategies

전희진 이주연 전아람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전희진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 연구 이주연 | 연구위원 | 제5장 일부
전아람 | 전문연구원 | 제2장, 3장 일부
최지훈 | 전문연구원 | 제4장 일부

자문위원 김혜경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운애 | 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진명숙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조교수

연구관리 코드 : 22GI1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행정 실천의 중요성이 증대
- 전라북도는 청년 여성의 인구 유출률이 매우 높고, 여성 대표성 등의 지역성평등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전북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에 따라,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더욱 강조
-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지위와 역량 향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확대하는 기반 마련 기대
-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여성단체, 학계, 경제계, 언론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방안을 제언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전북 젠더거버넌스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와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여건을 검토하고 지역 내 젠더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를 분석
- 연구방법은 젠더거버넌스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내 적합한 젠더거버넌스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 젠더거버넌스 참여경험, 미래전망, 전북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민관협치를 위한 방안 등을 질문
 - 전북 여성계의 미래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자들, 여성계의 실무자, 풀뿌리 청년 활동가 등 다양한 응답자와 면접 진행

2. 결론 및 정책제언

-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전북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① 다양한 참여자의 발굴, ② 젠더거버넌스 플랫폼 작동, ③ 여성단체와 행정을 비롯한 젠더거버넌스 구성원들의 협력, ④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룸
- 젠더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행정의 적극적인 성평등 제도 마련 및 사업의 수행, 의회의 성평등 의식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여성단체의 여성 의제의 공론화, 학계의 지역 진단 및 방향성 제시,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와 평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와 인식 개선 등 각각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 협업되어야 함
-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이러한 협업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주 중심의 지역 여성계의 활동을 전북 14개 시군으로 확장시키고, 청년세대의 발굴을 통해 지역 내 풀뿌리 네트워크의 연결을 유인하는 역할 수행 기대



〈그림 1〉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제언
 - 지역 여성사/기록의 축적으로 지역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 내 대학의 여성학 협동과정 설치를 통해 지역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여성·젠더 전문가의 양성
 -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내 젠더전문관·전담인력 지정을 통한 도내 사업이나 정책 운영에 있어 성평등 수행 관련 자문
 - 세대를 넘어서 변화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기술적 진보에 따른 기술교육을 넘어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의 필요

차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주요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 추진체계 6

제2장 젠더거버넌스의 이론과 사례검토

1. 성 주류화 제도와 젠더거버넌스 9

 가. 성 주류화 9

 나. 젠더거버넌스 10

2. 젠더거버넌스 구축 모형 12

 가. 젠더거버넌스 구성 주체 12

 나. 젠더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13

 다. 광역형 젠더거버넌스 모델 14

3.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사례 15

 가. 민관협치형 15

 나. 시민주도형 18

 다. 여성단체주도형 21

제3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27

 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기본조례 분석 27

 나.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55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역사적 경험 58

 가. 전라북도 여성운동의 역사 58

 나.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성공 사례 62

3.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현황 65

제4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인식 및 기대**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심층면접 69

 가. 심층면접 개요 69

 나. 심층면접 주요응답 72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미래전망 79

3. 소결 86

차 례

CONTENTS

제5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89
2.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98

참고문헌 100

영문요약 (Summary) 102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심층면접 질문 주제	5
[표 2-1]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10
[표 2-2] 젠더거버넌스 구성주체 범위의 확대	12
[표 2-3] 젠더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참여형태 및 역할	13
[표 2-4] 광역형 젠더네트워크 모델 분석 내용(안)	14
[표 2-5] 2018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추진체계	16
[표 2-6] 경기도 젠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2016~2019)	19
[표 2-7] 광주지역 여성단체의 젠더거버넌스 사례(정치네트워크)	21
[표 2-8] 광주광역시 젠더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23
[표 3-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28
[표 3-2]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29
[표 3-3]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1
[표 3-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2
[표 3-5]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34
[표 3-6]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5
[표 3-7]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7
[표 3-8]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8
[표 3-9]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39
[표 3-10]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1
[표 3-1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2
[표 3-1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3
[표 3-13]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	45
[표 3-1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6
[표 3-15]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7
[표 3-16]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9
[표 3-1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50
[표 3-18] 전국 성평등·양성평등 기본 조례	51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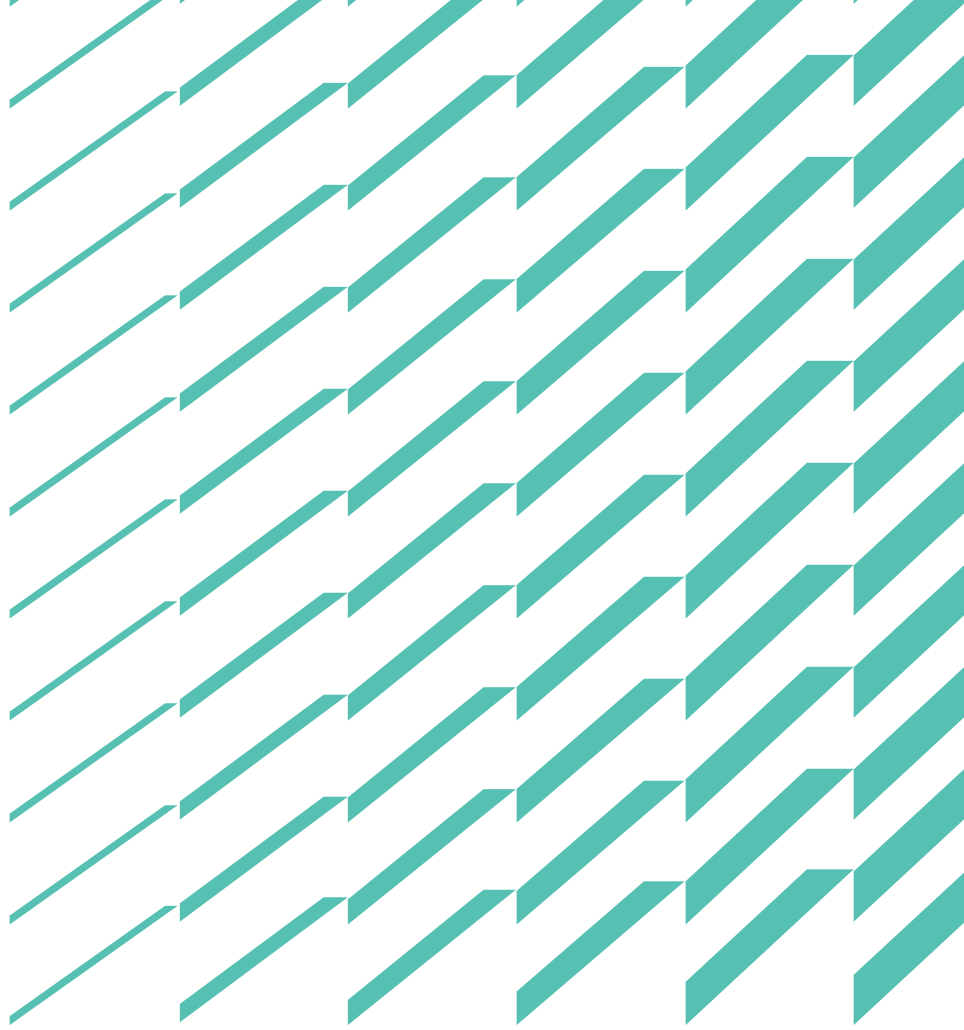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 3-19]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56
[표 3-20] 전북여성단체연합 주요활동 영역	60
[표 3-21] 전북여성정책포럼의 역할 및 활용방안	61
[표 3-22] 2022년 전라북도 젠더문화축제 참여기관 명단	66
[표 4-1]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심층면접 대상자	70
[표 4-2] 젠더거버넌스 관련 심층면접 질문내용	71
[표 5-1] 전북 젠더거버넌스 주체별·기간별 과제	91
[표 5-2] 전북지역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안)	94
[표 5-3] 2023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사업계획(안)	95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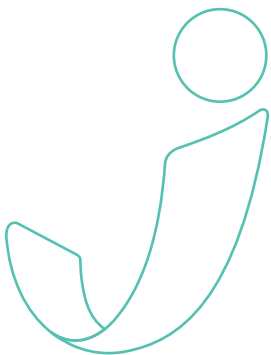
[그림 1-1]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체계	6
[그림 2-1]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13
[그림 2-2]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례	15
[그림 2-3]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17
[그림 2-4] 충남 젠더거버넌스 운영체계	18
[그림 2-5] 경기 젠더거버넌스 운영체계	19
[그림 2-6]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치의 과정	20
[그림 2-7] 광주 젠더포럼 운영체계	23
[그림 3-1]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	55
[그림 3-2] 전북여성정책포럼 조직도(2009년, 2014년)	61
[그림 3-3] 선미촌 시티가든 기억공간	63
[그림 3-4] 2022년 전라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경과	65
[그림 5-1]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89
[그림 5-2] 지역 젠더거버넌스의 주체 및 역할	90
[그림 5-3]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초지자체 네트워크 가능성(안)	92
[그림 5-4]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광역형 분과별 네트워크 모델안	93
[그림 5-5] 2023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주요사업안	93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기에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행정 실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청년 여성의 인구 유출률이 매우 높고, 여성 대표성 등의 지역성평등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전북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에 따라,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젠더거버넌스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개선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로 전라북도 지역의 행정, 의회, 시민사회, 성평등 정책전문가가 조성해가는 민관협치 구조라고 할 수 있다(나성은·황은정, 2018).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지위와 역량 향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전북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여성단체, 학계, 경제계, 언론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형의 분과별 네트워크와 시군과의 협의체를 통한 기초형 네트워크의 협력체계의 연결 방안 검토를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구상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우선 성주류화 제도와 젠더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젠더거버넌스 개념의 변화와 구성체 확대 과정을 추적하여,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와 기대역할을 살펴보았다.

다른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사례를 검토하여, 젠더거버넌스 구심점 역할 수행에 따라 민관합치형, 시민참여형, 여성단체주도형으로 나누어지는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가장 적합한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실제 현재 젠더거버넌스로 작동 중인 성평등위원회의 활동과 지역 내 전북 여성 네트워크 활동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젠더이슈에 대한 이해 및 합의, 추진체계와 젠더거버넌스 구성의 주요 참여자(단체), 참여구조, 민관협치의 관계, 시군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 그리고 젠더거버넌스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구축의 역사적 조건과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전북 젠더거버넌스의 긍정적 기억을 확산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러한 성공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이후의 젠더거버넌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분석하였다.

전북과 타지역 성평등·양성평등 조례를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현황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는 젠더거버넌스 담당 공무원 및 시민, 여성단체 활동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분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북에 적합한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북 광역형 젠더거버넌스 모델의 검토에 더하여, 기초자치 단체의 젠더거버넌스 현황도 검토하여, 기초형 젠더거버넌스 모델 발굴 및 광역과 기초의 연계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전북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은 형식적 네트워크만이 아닌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환류를 끌어내, 전북의 성평등 정책의 확산과 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젠더거버넌스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진행하여, 우선적으로는 양성평등 법률 및 성주류화 제도 관련 법률 등 법안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성평등 관련 조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젠더거버넌스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찾고자 한다.

전라북도 내의 행정과 의회의 여성정책 관련 활동을 검토하고, 지역 내 여성단체의 현황 및 여성계 활동을 점검하여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분석하고자 한다.

2) 심층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관련 참여자인 시민/여성단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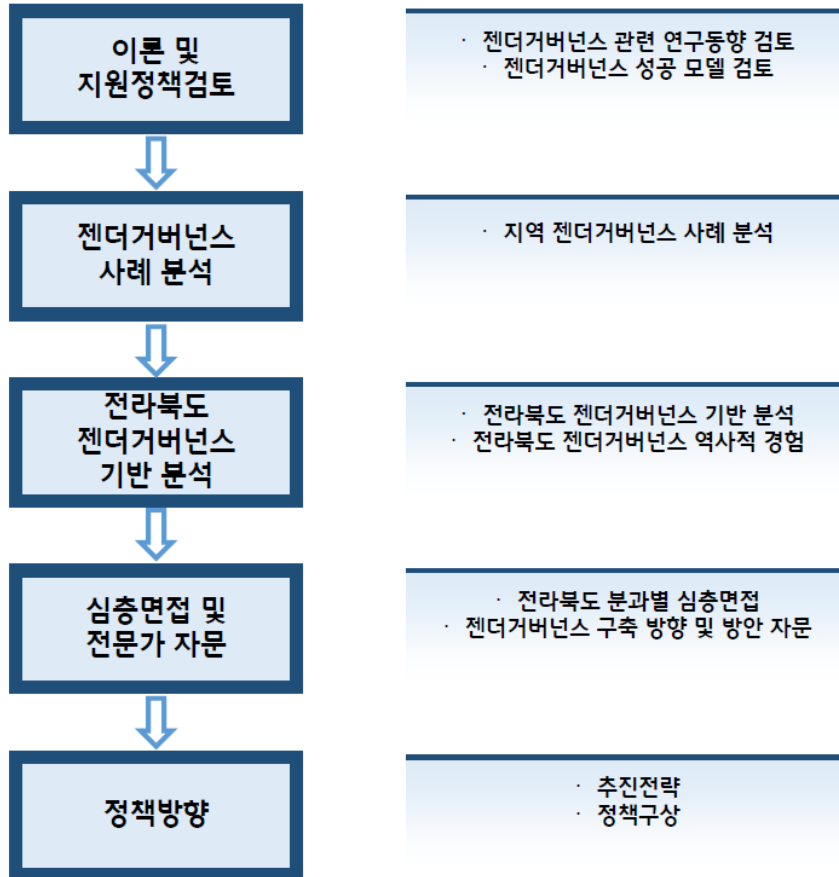
[표 1-1] 심층면접 질문 주제

- 젠더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및 참여 경험 등
- 다양한 주체의 발굴 방안 및 역량강화 방안
- 거버넌스 안의 소통 방식 및 협력방안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정책 방향 및 사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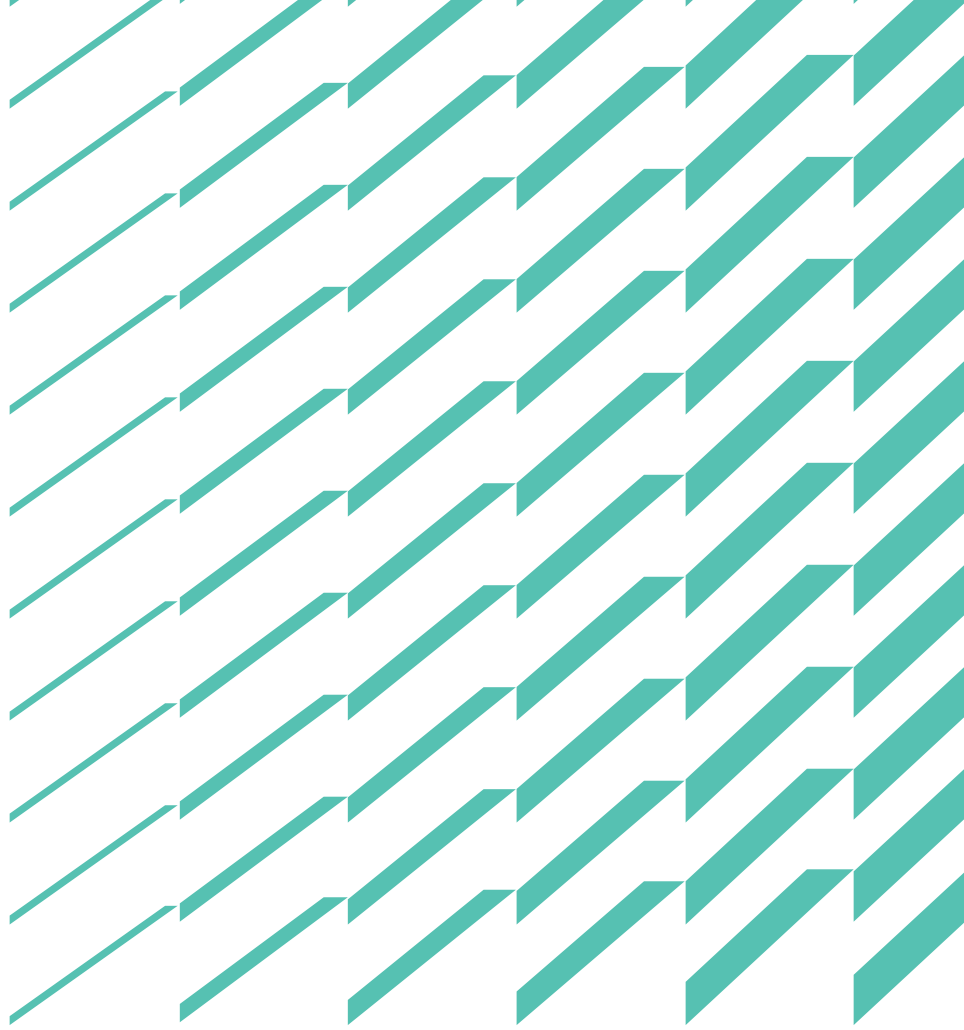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 지역 사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전라북도에 주는 시사점과 전라북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다.

다.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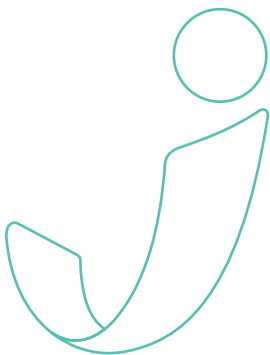
[그림 1-1]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체계



제 2 장

젠더거버넌스의 이론과 사례검토

1. 성 주류화 제도와 젠더거버넌스
2. 젠더거버넌스 구축 모형
3.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사례



제 2 장 젠더거버넌스의 이론과 사례 검토

1. 성 주류화 제도와 젠더거버넌스

가. 성 주류화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는 정책 실행에 있어 성인지적(gender-sensitive)인 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1995년 제4차 UN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과 2015년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천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국가 성평등지수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평등 제도의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 참여를 비롯하여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문화 확산, 기금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는 성 주류화를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은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각 집단의 입장에 따라 상호대립적일 수 있어, 성평등의 해답은 경합적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한정원 외 2008, 박주은 외 2019). 이에 따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한정원 외 2008, 김경희 외 2009), 이러한 합의와 교섭은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젠더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는 체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Rhodes 1997; 오민지 외 2022). 특히 1970년대의 국가 중심적인 접근과는 달리, 시장이나 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아닌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상호보완과 속의, 협치의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에 지역 요소가 포함된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는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대안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안영훈 2009; 오민지 외 2022). 한국도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생활권이 형성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과거 수직적인 중앙-지방 정부 간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이슈를 지역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중앙,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등의 다자간 관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젠더거버넌스는 젠더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것으로, 여기서 젠더는 정책의 내용이 되고, 거버넌스는 정책 내용을 만들어가는 틀로써 역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숙연 외 2006). 젠더의 다의적 개념과 거버넌스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숙의를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젠더거버넌스 자체를 구성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젠더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표2-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이 기반을 두고, 협력체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1]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연구자(년도)	정의
장영민 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개념에 성 분석틀로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성평등 정책의 한계를 넘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개념
원숙연(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형태로 발현되고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별적 관계를 완화·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구조

[표 계속]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

연구자(년도)	정의
김경희 외(2012)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
김영주(2012)	• 정책에서 젠더 이슈가 주류화되고 그 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협력 체계
허성우(2013)	•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내 성인지적 관점을 지향하는 여성 개인과 집단들의 공동 협력을 통한 민주주의 정치
오나경(2014)	•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와 지역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을 통한 협상과 협의의 과정
안태윤 외(2016)	•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젠더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
김재민(2016)	• 국가적 수준에서 성차별적인 정책을 개선하거나 또는 사회의 젠더체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바꾸어 나가는 국가-시민사회간 협력체계이자 상호작용
나성은 외(2018)	•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에 참여하는 협력체계

자료: 나성은 외(2018)

전라북도의 젠더거버넌스는 이러한 젠더적 관점과 지역의 관점이 통합되어, 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적 상황과 연계되지만, 또한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체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내용은 물론,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시스템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젠더거버넌스 연구들이 대부분 광역 모델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북 실정에 맞는 광역형 젠더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연결망 확대 방안의 가능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광역과 기초의 연결망의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전북 안에서의 차이를 고려하고, 그 안에서의 연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젠더거버넌스 구축 모형

가. 젠더거버넌스 구성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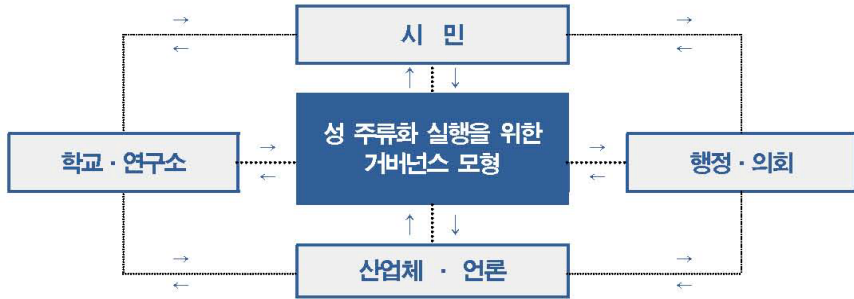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성주류화는 정부가 주도하여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는 시민 사회 주도형 젠더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다(박주은 외 2019). 성 주류화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실행주체인 행정, 젠더전문가, NGO 활동가가 결합하는 벨벳 트라이앵글(velvet triangle)의 통합적 연대와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oodward 2004; 김경희 외 2009). 이러한 젠더거버넌스의 구성 주체에 대한 범위는 시간에 따라 점차 더 확장되어서, 행정, 젠더전문가, 시민단체만이 아닌 광역 및 기초 단체의 의원, 지역 언론인, 모니터링단을 통한 시민까지도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젠더거버넌스 구성주체 범위의 확대

연도	범위	특성	연구자
2008	행정-젠더전문가-NGO	“벨벳 트라이앵글”	한정원 외(2008)
2009	행정-젠더전문가-NGO +확장형	“벨벳 트라이앵글” 확장형: 의회의원, 정당인, 언론인 등 포함	김경희 외(2009)
2010	행정-젠더전문가-NGO -의회의원-언론인	“젠더 거버넌스”	김경희 외(2010) 지역 연구(부산, 대전, 경기, 전남, 제주)
2011	행정-젠더전문가-NGO -의회의원-언론인	“젠더 거버넌스”	김경희 외(2011)
2012	행정-젠더전문가-NGO -의회의원-언론인 -시민(모니터링단)	“현장중심의 젠더 거버넌스”, 또는 “시민참여형 젠더 거버넌스”	김경희 외(2012) 지역 연구(광주, 대전)

자료: 강현아 (2013)

이와 같이, 다양한 참여자에 기반한 젠더거버넌스는 시민, 학계, 행정, 산업체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거버넌스의 주체, 네트워크의 형태, 이해관계자간의 책임, 참여방법, 중점정책 등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이갑숙·안정선 2013, 박주은 외 2019

[그림 2-1]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나. 젠더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젠더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은 주체, 참여형태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실천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의 한정되어있다기보다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평등 의제와 활동이 확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표 2-3] 젠더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참여형태 및 역할

주체	참여형태	(기대) 역할
행정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계획 • 집행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주류화 제도 개선 • 성인지 예산 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젠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 분석 및 평가 • 컨설턴트 및 자문 •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분석/연구 • 성인지 예산 컨설팅 • 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 젠더 관점의 정책 자문
의회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 법안 발의/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관점의 정책 심의 • 젠더 관점의 법안발의/제정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 및 비판 •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이슈 발굴/제언 • 정책환류 평가/모니터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여론 확산 •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이슈에 대한 여론 확산 • 성인지적 정책성과 홍보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활동 • 정책환류평가 • 비판 및 대안제시

자료: 강현아 (2013) 참조하여 확장

다. 광역형 젠더거버넌스 모델

젠더거버넌스 모델은 거버넌스를 총괄하고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서 민간주도형과 지자체주도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거버넌스의 참여주체가 행정, 의회, 여성단체,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 다층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등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과 현황의 차이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양성평등 종합계획에 따라 양성평등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환류체계를 넘어서는 좀 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의제 발굴의 방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2-4] 광역형 젠더네트워크 모델 분석 내용(안)

구분	거점주체	협의체구성	현황	지역
민간 주도	여성관련 전문기관	젠더거버넌스 구성	• 연령별, 성별, 활동영역별 네트워크	경기
	여성단체	젠더포럼	• 정치, 경제노동, NGO,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보육, 문화예술, 건축체육, 과학기술, 생태환경, 청년여성, 여성친화도시, 다문화 등 분과 구성	광주
지자체 주도	젠더자문관	지자체에 젠더업무 담당관(젠더책임관, 젠더자문관) 지정	• 젠더자문관을 통해 성평등 정책 담당	서울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구성	• 분과위원회 (젠더혁신, 일생활균형, 성평등문화 확산, 평등한자원배분, 안전건강사회)	충남
	양성평등정책전담 인력	양성평등전담인력 지정	• 양성평등정책임관(복지여성국장) 지정	울산
	위원회	(양)성평등 위원회 구성	• 양성평등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	부산, 제주, 인천, 강원, 대구, 세종 등

자료: 임현정 2020 참고

3. 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역의 젠더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구축 사례는 서울특별시의 민관협치형, 경기도의 시민참여형,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여성단체주도형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 박주은 외 2019

[그림 2-2]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사례

가. 민관협치형

서울시의 젠더거버넌스 운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반구축기와 2017년 이후의 안정화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나성은 외, 2018). 서울시 젠더거버넌스는 2013년 성 주류화 제도가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한 '젠더거버넌스'는 '시민' 젠더거버넌스라는 명칭으로 위원 구성, 역량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성과보고회 등이 진행되었다. 2014년에 들어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변화한다. 2014년은 '시민' 개개인보다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나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치구와 서울시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다.

2015년에는 일자리, 공동체, 안전 분야의 사업담당자, 전문가, 시민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분야별 사업을 논의하고, 점검지표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영역의 참

여주체가 시민개인에서 단체, 전문가로 확장되면서, 안정적으로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주체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나성은 외 2018).

김재민(2016)은 이 시기의 서울시 젠더거버넌스에 대하여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여성 가족거버넌스와 복지거버넌스가 동등한 참여구조를 구성함으로써 형식적 측면을 갖추었으나 성평등 관점을 복지 전반에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을 부분으로 인식하는 구조로 형성되었음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또한 ‘젠더’ 측면에서는 서울시 젠더거버넌스가 젠더친화적인 의제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그를 넘어서 사회체제를 바꾸는 성평등 의제의 제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2017년 서울시는 젠더거버넌스 운영 사업으로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수행하였다. ‘협치서울 의제사업’은 기존 젠더거버넌스 사업 예산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되고, 대상지역도 서울시 25개구 모든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자치구의 권력별 구성을 통하여 연대의 층위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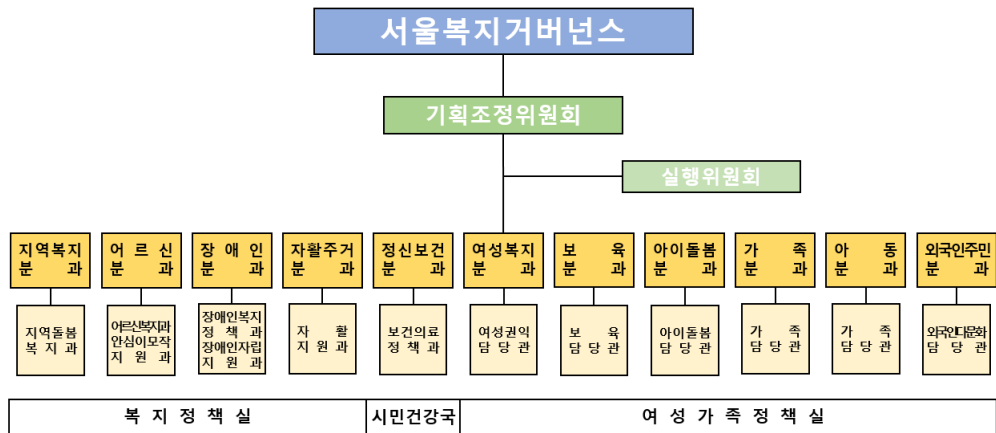
[표 2-5] 2018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추진체계

구분	협치민관협의체 (총괄 거버넌스)	서울시협의체 (분야별 거버넌스)	자치구협의체 (지역별 거버넌스)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추진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단위 현장활동 및 정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단위 현장활동 및 정책개선사업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젠더정책팀, 협치지원관 민간단체: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전문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젠더정책팀, 사업부서 민간단체: 서울YWCA,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자치구 담당자 정책연구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여성정책담당, 사업담당 시민활동조직 전문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개 자치구 단위의 풀뿌리여성조직과 5개 권역연대조직 역량강화교육 지역활동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 선정 현장활동 성인지 정책개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 단위 정책제안 간담회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젠더거버넌스 선포식, 한마당 운영

자료: 나성은 외(2018)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복지거버넌스 제1기(‘14.1~’16.1), 민간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2기(‘16,~’18.2), 실행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실행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3기('18.8~'20.8)를 지나, 복지거버넌스의 차별성 있는 기능 정립을 위해 구성된 제4기('20.8~'22.8)는 2022년 기준 기획조정위원회와 실행위원회,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분과는 복지정책실 내 4개 분과(지역복지분과, 어르신분과, 장애인분과, 자활주거분과), 시민건강국 내 1개 분과(정신보건분과), 여성가족정책실 내 6개 분과(여성복지분과, 보육분과, 아이돌봄분과, 가족분과, 아동분과, 외국인주민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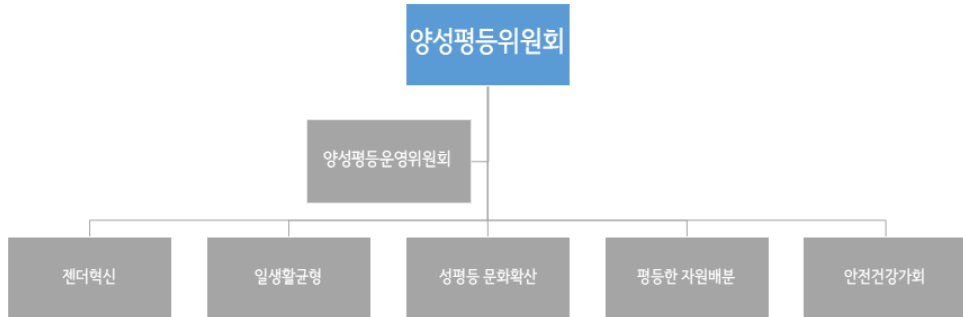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022), 2022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계획 재구성

[그림 2-3]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이러한 서울시의 젠더거버넌스 조직은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영역에서의 제도와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영역에서의 연대활동에 참여와 노력,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이론적 토대 제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2017년에 출범한 충남 젠더거버넌스는 도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충남 양성평등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양성평등위원회, 5개의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각 분과의 역할을 조정하는 양성평등 운영위원회의 단계로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다(임현정 2020).



자료: 임현정 2020 재구성

[그림 2-4] 충남 젠더거버넌스 운영체계

나. 시민주도형

12개의 시와 16개의 도농복합시, 3개의 군 등 총 32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지정학적 조건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수준과 정책환경 및 정책요구가 다르다. 여성의 삶 역시 지역적 차이에 따라 다양하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있다. 젠더거버넌스 출범 이전에는 도 단위의 4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경기도 성평등정책과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는 여성들이 지역사회 및 정책에 삶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동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정책수립 및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열린 소통과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가는 성평등 정책을 통해 경기도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5년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TF를 기반으로 준비회의와 워크숍을 시행하고, 2016년 민·관·학이 양성평등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젠더거버넌스센터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에 설립하였다(임현정 2020).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는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되어 여성친화네트워크, 젠더공감 2030 청년서포터즈, 성주류화정책참여단, 풀뿌리 여

성네트워크, 젠더인권네트워크, 젠더노동네트워크의 분야별 6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임원선출, 회의, 젠더거버넌스 리더십교육,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정책모니터링을 실시, 성과 공유회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박주은 외, 2019).



자료: 임현정 2020

[그림 2-5] 경기 젠더거버넌스 운영체계

[표 2-6] 경기도 젠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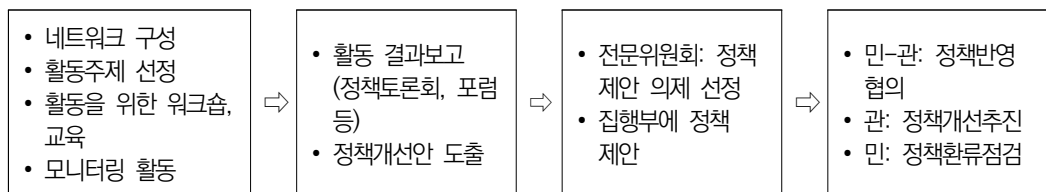
네트워크명	구성	활동과 역할
젠더공감2030 청년서포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20~30대 청년으로 구성, 매년 공모를 통해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한 청년문화 발굴과 성인지적 청년정책개발 팀별 활동을 통한 성평등콘텐츠개발, 영상제작 페미니즘 학습 등

[표 계속] 경기도 젠더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2016~2019)

네트워크명	구성	활동과 역할
여성친화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여성친화동시 시민참여단 단원 중 시군의 추천을 통해 각 시군별 2~3명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동시 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정책지원방안 제안
성주류화정책 참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교육과 정책모니터링활동 경험을 가진 활동가, 성평등교육 강사, 상담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책의 성인지 점검 및 정책발굴
젠더문화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관점을 가진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지역문화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정책 발굴 및 제안
젠더인권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관점을 가진 여성인권 관련 활동가, 교육계 종사자,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 여성안전과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젠더노동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관점을 가진 노동관련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전문가,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관련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 여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방안 모색 • 젠더관점의 노동정책 발굴 및 제안

자료: 안태윤 (2020)

이와 같이, 경기도의 젠더거버넌스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젠더전문가와 연계를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활동결과보고회(정책토론회나 포럼 등), 네트워크별 정책 개선안 도출, 전문위원회의 정책제언 선정, 도의 정책제언 수립, 집행부서의 정책개선 추진 및 정책 환류의 순으로 추진되고 있다(안태윤, 2020).



자료: 안태윤 (2020)

[그림 2-6]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치의 과정

경기도 젠더거버넌스는 향후 조금 더 다양한 도민의 참여와 젠더거버넌스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규칙의 제정으로 그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가지고 있다.

다. 여성단체주도형

광주지역은 1980년대의 치열한 시기를 지나 1990년대 운동이 다양한 분과로 발전하면서, 여성운동 역시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여성인권 회복 및 성평등 실현이라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김영신 2017). 이러한 여성단체 활동이 젠더거버넌스의 사례로 나타난 것은 2006년부터의 정치네트워크 운동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여성정책 발굴 및 공약제언이나 여성후보자 발굴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표 2-7] 광주지역 여성단체의 젠더거버넌스 사례(정치네트워크)

	2006년	2010년	2014년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발굴 및 공약제언 운동 여성정치 참여 확대운동 후보검증운동 유권자 실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여성후보 발굴 및 지지 지역특성에 맞는 풀뿌리 생활정치와 여성정책 개발과 제안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핵심과제 및 생활의제 마련 및 기자회견 실시 좋은 여성후보 정치역량 강화 여성정치네트워크 구축 활동
후보자 발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와 모금운동 지방선거 여성당선자와 간담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명의 좋은 여성후보 발굴하여 정당 추천 및 지지활동 좋은 여성후보 지지선언 발표 및 유권자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에 여성정치 참여 확대 요구 좋은 여성후보 발굴 및 지지활동을 통해 좋은 여성후보 공개모집 (심의를 통해 9명 선별)

[표 계속] 광주지역 여성단체의 젠더거버넌스 사례(정치네트워크)

	2006년	2010년	2014년
공약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3.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4.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5. 공공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확충 6.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 정책 실시, 성매매 여성들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 7.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8.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 마련, 한부모·국제결혼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9. 빈곤 여성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10.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11. 지방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 1인을 여성으로 임명,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일자리 걱정 없는 광주 - 여성종합고용지원센터 설치 2.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 강화 3. 다양한 사회존중 복지도시 - 한부모 가정, 다문화 여성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노인 자활지원 및 권익증진 4.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함께 일하고 돌보는 도시 만들기'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방과후 아동보호시설 확대 5. 여성문화 역량개발을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 - 정책적 고려 및 여성참여 보장 6. 여성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성평등 도시 만들기 - 조례제정 및 정책연구기관 설치 7. 자녀교육 걱정 없는 교육복지실현도시 만들기 - 학부모 교육감 교육위원 소통 시스템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 평등한 일터 - 생활임금제 도입 2. 돌봄의 사회적 책임 -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강화 3. 반폭력·인권·안전한 도시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성매매 통합지원센터 설치 - 탈성매매 여성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설치 4. 건강·복지 환경 조성 -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 여성장애인 지원서비스 강화 5. 여성·생활 문화 정책 구축 - 여성커뮤니티 공간마련 - 성인지적 문화정책 수립 6. 나눔과 소통의 마을 공동체 -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식당 확산 - 함께 건강한 마을 저녁급식 조례 7. 성평등 기반 구축 - 성평등기획관 신설 - 일상 속 성평등 정책 확산

자료: 김영신 (2017)

이러한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젠더거버넌스의 주체는 '행정과 의회', '여성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

[표 2-8] 광주광역시 젠더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주체	행정과 의회	여성단체	연구기관 및 대학	시민사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마련 - 기부금제도 개선 - 보조금사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슈 공론화 - 시급사안 - 중장기적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 - 정책제안 - 방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 및 수혜자 - 이해와 공감 및 연대

자료: 김영신(2017)

이후, 광주지역 젠더거버넌스는 광주여성재단의 주도 하에, 광주젠더포럼을 구축하고, 11개의 다양한 분과를 통해, 여성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분과 특성에 따른 사업도 시행 중에 있다.



자료: 임현정 2020 재구성

[그림 2-7] 광주 젠더포럼 운영체계



제 3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역사적 경험
3.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현황



제 3 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기본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평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조례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젠더 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다. 젠더 자문관은 임기제 5급 공무원이며 업무 범위는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2021년 9월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위한 격차개선위원회(제50조)와 차별조사관(제56조)을 두고 있는데 차별조사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성평등 노동조사 업무와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제30조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성평등 기금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제42조)하고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 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운영 지원 등의 기능(제43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제20조에서는 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지원하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과목과 사회교육시설에서는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연 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함(제26조)을 명시하고 있다.

[표 3-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자문관 운영 :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차별조사관 채용 : 성평등 고용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성평등기금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연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부산시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양성평등추진 관련부서의 5급 수준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제6조 2항)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보조한다. 또한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확산을 꾀한다(제6조 3항). 제24조에서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며, 제1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연계에 대해서는 제33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에서는 가정, 학교,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2]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표 계속]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학교,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성별에 다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행정이 역할과 노력은 제14조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제21조를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는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가정, 학교,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등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3]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촉진과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교,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제6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부분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제10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인천시는 제31조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조직도 상 직책의 명시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는 여성네트워크를 조례 제2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

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2조에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 참여확대 및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할 때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2년마다 인천여성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제29조)을 명시하고 있다.

[표 3-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음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양성평등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2년마다 인천여성백서를 발간하여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경우 성평등에 대하여 조례 내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15조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등을 총괄하도록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제45조를 통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 경비의 일부를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제31조에서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국공립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에서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공무원교육원 및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에서는 성평등 관련 기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표 3-5]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성평등 정의	-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행정부시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으로 지정함 •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 등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국공립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함 •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 및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조례 내 성평등 정의는 없으며, 성평등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노력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와 제18조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 담당관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양성평등 담당관은 시 본청의 실·국·본부 단위 행정기구 내 양성평등 목표 설정, 성 주류화 제도 점검, 실·국·본부 소관 영역 정책과 사업분야에 성인지 관점 반영,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 및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지정한다. 대전시 역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적극적 조치(제24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19조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사업, 생활 속 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대 사업, 그 밖에 성 주류화 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대전시는 제39조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에서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국공립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에서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공무원교육원 및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에서는 성평등 관련 기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34조에서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여성가족원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3-6]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양성평등 및 설 주류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 단위 행정기구의 주무과장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지정함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함 • 성 주류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사업, 생활속 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대 사업, 그 밖에 성 주류화 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표 계속]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평생교육시설 및 여성가족원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복지여성국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으로 지정(제6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계에 대하여는 제17조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문화 촉진 사업, 교육·연수, 정보교류 등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울산광역시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제14조에서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국공립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해야하며,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3-7]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으로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문화 촉진사업,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국공립연수기관, 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되도록 지원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세종시는 조례 제17조에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에서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에 대하여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27조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8]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고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경기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경기도는 제5조에서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와 제18조에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그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담당 팀장을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 주관하며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상황 정리보고 및 제도 개선, 성별영향평가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제23조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에 중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등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연계에 대해서는 제25조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더불어, 단체의 운영비, 양성평등 참여 확대/문화 확산/촉진을 위한 사업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정보 제공/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있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 2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3-9]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도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담당 팀장을 양성평등정책전문인력으로 지정함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하며,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등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강원도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양성평등을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노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제8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제37조)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제37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추진 등을 총괄하는 것이며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현황 관리, 양성평등위원회의 안건 검토 등 운영지원 등을 담당한다.

강원도는 제26조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 범위에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 가정, 영유아시설, 학교,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 교육계획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관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양성평등 관련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23조에서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 의식 강화를 위하여 도내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표 3-10]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양성평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가정, 영유아시설, 학교,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음 •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백서를 발간하여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림 •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인식 강화를 위하여 도내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함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성별의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충청북도는 조례 제14조에서 성 주류화 조치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는 제19조 2항에서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민·

관거버넌스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에서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제 19조 2항에 따른 민·관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28조에서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도 자치연수원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9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1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의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사는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둘 수 있음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민-관 거버넌스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며 도 자치연수원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평생교육시설 및 연수교육 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함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충청남도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경우 양성평등에 대하여 조례 내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19조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제25조를 통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국내외 여성단체 교류 등 활동에 예산 및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제22조 2항에서는 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 및 연수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에 따르면 양성평등 교육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 지원과 양성평등 교육 관계자 협의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표 3-1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양성평등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들의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평등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양성평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있다(제17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복지여성보건의국장으로 지정하며,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조치 추진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조치 현황 관리, 성평등위원회 안건 검토 등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에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 제36조이다. 그 내용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주사무소가 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성평등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도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3년마다 도 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표 3-13]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복지여성보건국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 •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주사무소가 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비영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 •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며, 3년 마다 도 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림 •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대부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양성평등기금과 여성친화도시, 전남여성가족재단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의 내용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1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
행정의 역할과 노력	-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경상북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 정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조례 제8조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5급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민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는 제9조에서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4조를 통해서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여성가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제10조를 통하여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며,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표 3-15]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5급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함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함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경상남도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소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해야 함을 명시한다.

제17조에서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8조에서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19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표 3-16]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경우 양성평등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 제11조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담당을 양성평등 담당으로 지정하고 있다.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각 부서 내에서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결산, 성별분리통계 관리,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에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제주도 성평등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제28조를 통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제19조에서는 가정, 영유아시설, 학교,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

며,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며 평생교육시설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조에서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공무원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등이다.

[표 3-1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분	내용
양성평등 정의	-
행정의 역할과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 기획조정실장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 •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민사회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영유아시설, 학교,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며, 교육기관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주도 산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표 3-18] 전국 성평등·양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	정의	행정의 역할과 노력	시민사회와의 연계	기타
서울	성평등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지문관 적극적 조치 차별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평등 촉진위한 시설 설치 운영 성평등교육 서울여성백서 발간
부산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적,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의식제고 사업 추진
대구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적,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의식제고 사업 추진
인천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여성백서 발간

[표 계속] 전국 성평등·양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	정의	행정의 역할과 노력	시민사회와의 연계	기타
광주 성평등 양성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의식교육 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류 기관 설치·운영
대전 양성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교육
울산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의식교육
세종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적,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가능
경기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표 계속] 전국 성평등·양성평등 기본 조례

	명칭	정의	행정의 역할과 노력	시민사회와의 연계	기타
강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 여성백서 여성 역사인물 발굴·계승 양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가능
충북	양성평등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의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거버넌스기구 설치 가능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가능
충남	양성평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
전북	성평등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교육 성평등백서 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가능

[표 계속] 전국 성평등·양성평등 기본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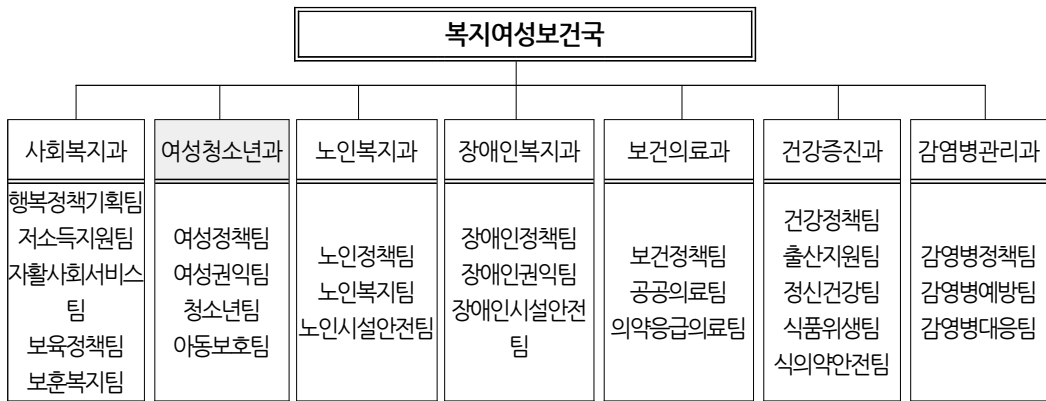
	명칭	정의	행정의 역할과 노력	시민사회와의 연계	기타
전남	여성평등 양성평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
경북	양성평등 양성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수립 목적 기 초조사 및 여론조사 실시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가능
경남	양성평등 양성응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촉진 시설 설치·운영 가능
제주	양성평등 양성응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적극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지원 및 경비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나.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추진여건

전라북도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2015년 제정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마련되었고, 2022년 일부 개정되었다.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라북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 촉진 시책,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성평등기금 등을 명시하고, 특히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 소속의 여성정책팀과 여성권익팀이며, 여성정책팀은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평등위원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권익팀은 성평등기금과 여성단체 육성,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관리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인력의 부족과 성 주류화 업무 분장이 부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최유진 2022).



자료: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

[그림 3-1]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 담당기구

[표 3-19]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분	직위	업무
여성 정책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 업무 총괄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 공약사업추진 · 도지사 지시사항 업무추진 ·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 BSC성과관리 · 감사원, 국회, 도의회 요구자료, 감사자료 · 간부회의 자료 작성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지원·협력 ·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양성평등정책 종합평가(중앙, 자체) 총괄 · 양성평등시책 업무추진 성별영향평가(법령, 사업 등) 업무추진 ·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 운영·관리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 국가예산 확보 추진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관리·지도 감독 · 여성관련 통합재단 설립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및 추진 · 전북 및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관리 및 지도·감독 · 시군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상담사 관리 ·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관리 및 지도·감독 · 시군 여성회관 관련 사업 추진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여성경제활동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전북여성화요간담회 운영·지원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예산서무, 일반서무 · 국가예산 발굴 및 관리 과 일상경비 지출, 지방재정관리 추진 · 제수당(복리후생비 등) 지급 실과소, 도의회 등 예산 관련 요구자료 · 비밀보안업무 여성, 청소년, 가족분야 총무계획 수립 관리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서무

[표 계속]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분	직위	업무
여성 권익팀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권익지원 업무 종합 기획·조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발굴 • 여성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현장지원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공동협력 및 사회단체보조사업 • 여성·가족분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관리 • 여성·가족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리 • 성평등기금 운영 관리 및 여성단체 육성 지원 •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단체 지원 •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 •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 아이돌봄지원 광역거점기관·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 가족정책 추진 일반 • 가족센터 건립 사업 지원 • 가족역량강화 사업 지원 • 부모교육사업 및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교육지원 • 여성권익 도의회 등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총괄 • 여성권익 성과지표(BSC) 관리 • 여성권익 신규시책 발굴 등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수립 관리 • 해바라기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지원 및 지도 감독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기관 지정·운영 • 성 인권 교육 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무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및 지도 감독 • 가정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운영 지원 • 여성폭력상담소보호(통합)시설 종사자 교육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지원 •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 및 교정 치료 사업 • 성매매피해자 자립 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성매매피해자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자활시설 기능보강 • 여성권익팀 일반 서무

자료: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역사적 경험

가. 전라북도 여성운동의 역사

■ 젠더거버넌스의 역사적 구성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는 한국사회 안에서의 정치적 변동 및 사회운동의 변화과정, 지역의 역사적 경험, 여성 관련 사건 등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젠더 관련 의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등장하면서 거버넌스 활성화의 기대를 보이기도 하고, 그 역의 경험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협업의 시작점이자 성공 사례로 보여질 수 있는 전라북도 여성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역사성에 대한 접근 외에 현재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분과의 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기대 및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결론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는 실제 여성운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술 및 평가의 목적이 아닌, 젠더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정책이나 지역 정부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경험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한 전북형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성공 사례의 적극적 발굴을 시도하고자 한다. 지역 안에서 젠더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나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성공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이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지역 젠더거버넌스 활성화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¹⁾.

■ 지역성폭력 사건 대응 협업 및 법률제정

1991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 사건²⁾과 1992년

-
- 1) 이 글에서는 다루어지는 전라북도 여성운동은 운동의 전체적인 역사를 검토하기보다는 이러한 젠더거버넌스의 성공사례 예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의 여성연구가 더욱 풍부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사건명을 피해자의 성명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하여 피해자 이름을 대신하여 서술식으로 풀어서 명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9살 때 강간당한 후, 21년 뒤에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라고 한 외침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의붓아버지의 지속적인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³⁾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공동대응은 결과적으로 성폭력특별법(1994년) 제정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 485-6). 특히 남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련해서는 당사자 면회, 가족 면담, 공동변호사 구성, 판사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언론사 홍보, 서명, 후원회 구성 등의 활동에 있어 「전북 여성의 전화」가 간사단체로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의 공동 대응을 전개하기도 했다(전주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 486).

■ 전북여성단체연합

다른 한편으로는 1988년 결성된 ‘전북민주여성연합’은 민주화운동의 분과단체로서 여성 세력을 정체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동시적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북민주여성연합’은 1989년 명칭을 ‘전북민주여성회’로 변경하고, 각계각층 여성의 계층별, 부문별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후 지역여성운동세력을 포괄적으로 결합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하여, 지역여성운동진영에서 여성운동의 재편에 대해 공감하고, 그간 성장한 부문 운동단체인 전북민주여성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 여성의 전화, 전북지역 사회탁아소위원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기독교계 여성조직 등 총 6개 조직을 통합하여, 1992년 전북여성운동연합 건설 준비위원회(‘일하는 여성들의 모임’, ‘환경을 지키는 여성들의 모임’,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지역 탁아소위원회’, ‘전북 여성의 전화’, ‘전북 장로교 청년연합회 여성선교위원회’,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 총 7개 조직)를 발족시키고, 여성들의 투표 참여, 여성노동자 산전 유급휴가 90일 확대, 탁아소 지원, 공공기관 여성 의무 할당제, 성폭력특별법 제정, 입법부와 행정부의 여성참여 비율 증대, 정신대 피해자 생계대책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3년 전북여성운동연합 건설 준비위원회는 ‘전북여성운동연합’을 창립하였고, 이는 전국 최초의 지역여성운동연합체였다(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 488).

.....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동했다(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 485-6).

3) 이 사건은 어머니의 재혼 이후, 새아버지가 어린 나이의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강도사건으로 위장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다.

1995년 전북여성단체연합으로 개칭하고, 시기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변화하였지만, 여성정치력 확보, 정책개발, 인권, 복지,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내 8개 회원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내 여성주체들과의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표 3-20] 전북여성단체연합 주요활동 영역

활동 주제	활동 영역
여성정책개발	- 지자체 정책 모니터 활동 - 여성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 - 여성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
생활정치 실현	- 의정·행정 모니터 및 성인지적 정책 예산 감시활동 -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 및 여성지도력 개발
여성복지, 인권 활동	- 여성폭력 상담 및 지원활동 - 성차별없는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활동 -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
성평등 문화, 정보 활동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활동 - 여성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은 여성영화제 및 여성주간 행사 진행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 통일 실현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 확대 - 평화 문화 확산 노력
시민단체 NETWORK	-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연대 - 시민사회·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출처: 전북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jbwomen.or.kr/?page_id=19

■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1999년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가 창립되어, 지방자치에 있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 지역의 많은 여성정치단체들이 중앙에 본부를 두고 지방의 지부형태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전북은 정당 구분 없이 정치적 중립을 모토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발굴·육성하고, 교육과 훈련, 선거 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 외에도 여성유권자 교육, 여성정치대학, 어린이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전정희 2011: 229-231).

■ 전북여성정책포럼

2009년에는 전북발전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전북여성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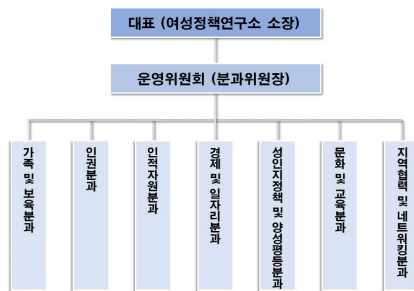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고,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목표로, 여성계를 비롯하여 민·관·학·연 전역을 아우르는 의견수렴을 통해 전라북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포럼을 통해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연구자, 활동가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산적인 정보 제공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허명숙 외 2009).

[표 3-21] 전북여성정책포럼의 역할 및 활용방안

포럼의 역할과 범위	포럼의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제안과 자문 - 여성연구에 대한 이슈발굴과 자문 - 여성계 및 관련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 - 여성의 발전과 공익신장을 위한 각종 활동 - 기타 현안이슈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진단이 필요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연구 의제선정, 정책제안, 현안대응 등에 반영 - 포럼 활동 결과 출판물 발간을 통해 여성계와 학계 등 정보공유, 도와 시군 등 주무부서에서 정책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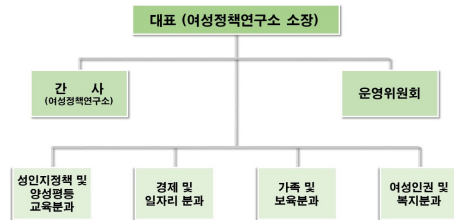
출처: 허명숙 외 2009, 조경옥 외 2014

2009년 시작되는 시기에는 7개 분과(가족 및 보육분과, 인권분과, 인적자원분과, 경제 및 일자리분과,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교육분과, 문화 및 교육분과, 지역협력 및 네트워킹 분과)로 구성하고, 각 분과별 10~12명의 포럼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의 여성정책 관련 정보 교환과 의견 수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허명숙 외 2009). 2014년에는 분과를 4개로 조정하여,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교육분과, 경제 및 일자리분과, 가족 및 보육분과, 여성인권 및 복지분과로 나뉘어져 포럼이 진행되었다(조경옥 외 2014).



2009년 전북여성정책포럼 조직도

출처: 허명숙 외 2009; 조경옥 외 2014



2014년 전북여성정책포럼 조직도

[그림 3-2] 전북여성정책포럼 조직도(2009년, 2014년)

전북여성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보육, 가족, 여성일자리, 사회적 기업, 결혼이주여성, 여성인권, 지역거버넌스, 여성의 정치세력화,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 등 여성관련 중요 주제들을 다루어왔다(조경옥 외 2014). 이후 전북여성정책포럼은 성평등정책포럼으로 명칭을 개편되어, 현재까지 성평등 관련 핵심 주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1년에 4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나, 분과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나.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성공 사례

■ 새로 만드는 선미촌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5명의 성매매 여성의 사망사건과 감금 상태로 인해 탈출할 수 없어 질식사했다는 소식은 전북지역 여성운동단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이어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로 14명의 성매매 여성을 포함하여 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은 대책위원회 활동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발생시켰고, 이후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의 결과를 이끌어냈다(송경숙 외 2021).

군산화재참사를 경험하면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01년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이후 2002년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인근에 현장상담센터를 열어, 성매매여성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선미촌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상담을 진행하고, 구조지원, 자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배경으로 2014년 선미촌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2016부터 전주시가 선미촌 업소 7곳을 매입하여, 현재 시티가든(기억공간, 인권공간), 뜻밖의 미술관, 새활용센터 '다시 봄', 물결서사, 성평등 전주, 예술협업창작지원센터로 변화시키면서 선미촌을 여성인권과 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송경숙 외 2021).



출처: 직접 촬영

[그림 3-3] 선미촌 시티가든 기억공간

선미촌에 대한 고민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해양부가 수행한 구도심재생사업으로 선미촌 인근 서노송동 지역이 선정되면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가 참여하여 지역주민, 전주시청과 함께 선미촌 문제의 공론화를 시작하였다(송경숙 외 2021: 122~124).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2013년 전주지속가능협의회와 협업하여 2014년에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선미촌 집결지의 폐쇄 및 도시재생, 여성인권 보호 및 자활지원 등을 목표로 3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기구가 구성되게 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들에게 선미촌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회의의 집담회를 년 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실제 전주시가 선미촌의 업소 건물을 매입 후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거점 공간을 만들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인권 투어, 선미촌의 공간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자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경시키는 ‘리본 프로젝트’, ‘예술 공연’, ‘여성인권 포럼’ 등의 활동으로 이러한 민관거버넌스의 작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다(송경숙 외 2021).

■ 젠더거버넌스의 경험, 그리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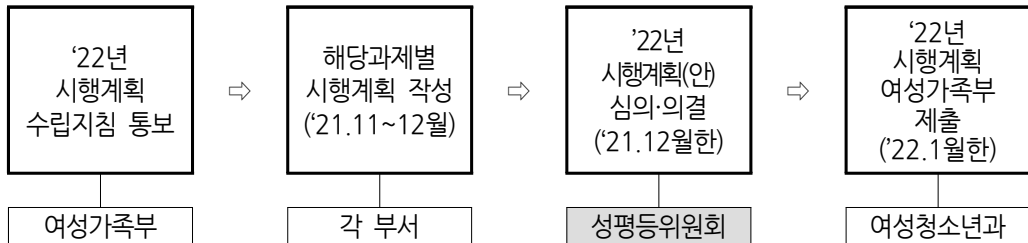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그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이지만, 지역을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결합이나 선미촌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공간에 대한 기억과 서사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 배제와 외면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의 인식의 전환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전북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젠더거버넌스의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다(박연정 2019).

서울의 영등포나 장안동의 성매매 집결지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강제적인 집행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곳에 있는 여성들의 자활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배워갔다. 영등포의 경우는 강제로 폐쇄를 하려고 했으나,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생존권 문제로 반발했고, 장안동의 경우는 강제적인 폐쇄는 이루어졌으나, 여성 2명이 자살함으로써, 결과로서의 폐쇄가 아닌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실 많은 정책이나 사업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폐쇄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과정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이후의 지역의 다른 모습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등 지속적인 과정 속에 있다. 전주시의 성공도 사실은 과정 속에 있고, 그러한 과정의 경험은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고,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작동하게 된다.

전주시의 선미촌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의 제정 등의 활동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방향의 결정과 조례의 결과로 순환되어 나타나고 있다(서난이 2019). 이러한 선미촌의 경험은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제가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현황

전라북도의 젠더거버넌스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년도 시행계획을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하고 있으나, 10명의 위촉직 위원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고, 각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 등은 현재 진행되는 서면심사로는 실제적으로 젠더거버넌스의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 2022년 전라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사 자료

[그림 3-4] 2022년 전라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경과

『2022년 전라북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에 따르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을 실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여성단체,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단체 등과의 연계, 지원을 통한 공론의 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전북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전북여성화요간담회” 실시와 “여성정책네트워크간담회”, “전북여성 미래포럼” 등의 실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022년 이후 사업 추진 방향은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간 정보 공유 활성화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젠더거버넌스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라북도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기반의 가능성으로, 2012년부터 개최된 젠더문화축제를 살펴볼 수 있고, 참여기관은 점차 확대되어, 2022년 제11회 젠더문화축제의 공동추진기관 및 단체는 38개에 이르고 있다.

[표 3-22] 2022년 전라북도 젠더문화축제 참여기관 명단

순번	기관	순번	기관
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2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21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3	(사)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22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4	(사)전북여성단체연합	23	전북가족복지 문화원
5	전북YWCA협의회	24	전주스마일센터
6	원불교전북여성회	25	전라북도노인보호 전문기관
7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26	전라북도사회적경제여성협의회
8	전북대학교 취업지원과	27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9	원광대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28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10	전주대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29	(사)여성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11	우석대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30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2	전주비전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31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13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32	전북이주여성상담소
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33	전북여성평등교육전문강사 커뮤니티
15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34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16	전북여성 인권지원센터	35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바스락
17	전주여성의 전화	36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신규]
18	전북여성장애인연대	37	(사)파트롤맘 전북지부[신규]
19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38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계	총 계 38개 기관·단체		

자료: 제 11회 젠더문화축제 공동추진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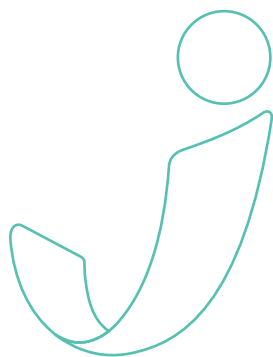
이 외에 전라북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고,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성별영향평가센터와 거점형 양성평가센터의 수탁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거버넌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젠더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인식 및 기대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심층면접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미래전망
3. 소결



제 4 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인식 및 기대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심층면접

가. 심층면접 개요

젠더거버넌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차는 전북 여성계 기관이나 단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젠더거버넌스의 대의에 공감하고 전북여성계의 미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자들과 여성계에서 실무자로 오래 활동해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차 조사에는 여성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 문화, 사회운동, 인권 등의 다양한 단체들과 지역과 세대를 좀 더 확장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1차조사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되었고, 2차 조사는 2023년 1월 3일에서 1월 2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면접대상자는 총 21명이었고, 20대는 4명, 30대 3명, 40대 8명, 50대 6명, 60대 1명으로 폭넓은 세대로 구성되었다.

1차조사에서는 기관의 역사와 젠더거버넌스 참여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그 기관이 담당하고 있거나 혹은 기대하는 젠더거버넌스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각각의 기관의 성격에 따른 젠더거버넌스 참여의 가능성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2차조사에서는 20-30대 젊은 활동가를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되어, 1차조사에서 진행된 질문에 추가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연대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개별면접조사로 진행하였고, 각 면접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표 4-1] 젠더거버넌스 구성원 심층면접 대상자

연번	구분	직책/활동	연령대	비고
1	사회단체 종사자	연구위원	40대	
2	여성기관 종사자	사무국장	50대	
3	여성기관 종사자	사무국장	50대	
4	여성기관 대표	대표	50대	
5	여성기관 대표	대표	50대	
6	사회기관 대표	대표	40대	
7	여성기관 종사자	사무국장	40대	
8	(전) 여성기관 대표	대표	60대	
9	연구기관 종사자	활동가	40대	
10	문화예술계 종사자	프리랜서 활동가	30대	전주 외 지역
11	교육계 종사자	교사	20대	전주 외 지역
12	사회운동 종사자	대표	20대	
13	교육계 종사자	프리랜서	40대	
14	여성단체 활동가	사무국장	20대	
15	문화예술계 종사자	(전)사무국장	40대	전주 외 지역
16	인권단체 활동가	팀원	20대	
17	여성단체 활동가	대표	30대	
18	언론계 종사자	부장	40대	
19	여성단체 활동가	사무국장	40대	
20	여성단체 활동가	부소장	30대	
21	학계 종사자	교수	40대	

자료 : 저자 작성

면접 질문은 젠더거버넌스 참여경험, 전북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발전방안 및 미래전망, 활발한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민관협치 방안 등을 질문하였다.

젠더거버넌스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참여과정에서의 역할, 업무내용, 참여기간, 경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참여과정에서의 개인적, 조직적 성과와 참여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했다.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발전방안 및 미래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방안, 거버넌스 안의 소통 및 협력방안 등에 관해 질문했다. 또한 인터뷰 시기에 새

로운 정부 방침에 따른 여가부 폐지 등의 이슈가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른 경험과 전망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여성운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라북도 여성운동 및 단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주제로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와 환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전북 젠더거버넌스가 도심지역에서 확장되어 전북 내의 군지역까지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표 4-2] 젠더거버넌스 관련 심층면접 질문내용

분야	구체적인 질문
젠더거버넌스 참여경험	- 젠더거버넌스 운영 주체 및 참여자 특성
	- 젠더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의 역할, 업무내용, 참여기간
	- 젠더거버넌스 참여경로
	- 참여과정에서 개인적, 조직적 성과
	- 젠더거버넌스 참여과정의 어려움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발전 방안 및 미래전망	- 다양한 주체의 발굴 및 역량강화 방안
	- 거버넌스 안의 소통방식 및 협력 방안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정책 방향 및 사업제안
	- 정부의 여성 정책방향과 지역 여성정책의 기대
	-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적합 모델안	
전북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 전라북도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긍정 및 부정 측면
민관합치를 위한 방안	- 여성단체와 의회의 합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환류 확대 방안
	- 광역형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행정의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응답자 기본정보	- 소속기관 및 활동 분야
	- 직책
	- 활동기간

자료 : 저자 작성

나. 심층면접 주요응답

1) 전북 젠더거버넌스 참여자 특성 및 경험

응답자들의 많은 경우 여성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젠더거버넌스로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하여, 젠더거버넌스 참여 경험보다는 여성운동이나 젠더 이슈에 대한 활동이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 질문하였고, 많은 활동가들이 대학시절부터 여성단체와 연계된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인연을 통해 여성단체에서 일하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여성계의 오랜 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지역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한 응답자가 소속된 각 기관별 특성에 그 기관이 담당하고 있거나 혹은 기대하는 젠더거버넌스 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였고, 기관의 성격에 따른 젠더거버넌스 참여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여성 4단체로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북/전주YWCA', '원불교 전북교구 여성회'가 존재하고, 이들은 여성계를 대표하여 정치인들의 만남이나 주요 행사에서 여성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긴 기간 이 4단체가 연대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서는 정기적인 모임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시기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여성단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과는 달리 임기직인 대표의 변경은 단체의 성격이나 젠더이슈의 이해나 참여 의지에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조직의 성격이나 구성원에 따라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에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편이 더욱 조직 내 구성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였다(심층면접 2)

기존의 단체들이 제도적으로 많은 여성단체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여성 정치인이나 지방정부의 전·현직 여성 고위 공무원들 역시 소속되어 있고, '여성 도의원 간담회'와 같은 행사도 진행되고 있어 젠더 이슈의 소통이나 지방정부로의 의견 전달 등의 효과적 통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많은 고유의 활동으로 젠더거버넌스와 같은 연대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심층면접 2).

경력과 지역에서의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에 더하여, 한편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성, 소수자, 환경, 예술 등에 활동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 활동가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단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맺고 있는지와 지역 젠더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을 질문하게 되었다.

세대 간 관계망의 확장 가능성이 전주지역에서는 국가 페미니즘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성평등전주>의 활동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페미니즘 이슈에 관한 연구나 소모임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소액의 활동비만이 아닌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인 모임들의 기한과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한 지역의 젠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작동하기도 했다(김혜경 2022: 202). 이와 같이 청년층은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 설립된 <성평등전주>의 네트워크 사업, 여성주의 연구지원 사업, 리빙랩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이를 통한 연결망 확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기관에 속해서 활동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운동가들의 경우는 “비혼여성공동체 비비(비혼들의 비행)”의 여성주의 공부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활동가 역량 강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비공동체에서 진행된 강좌가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강좌가 많이 있었고, 그 기획단에 참여하면서, 실제 지역 여성주의 활동가로 성장하는 경로를 가지기도 했다(심층면접 9, 13).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단체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략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협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원인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참여자로 등장하는 행사 개최에 대한 의지는 높은데 비해, 실제 그 의견이 경청 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이후의 연대활동을 멈춘 젊은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참여의 문제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단체의 역력이 부족한 점과 청년세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보였다.

청년세대에게 기존 단체들과의 연결된 지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고, 청년 중에 환경, 장애인, 동물복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활동가들과의 횡적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성세대와의 점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결하는 방식, 동력 등에 있어서 차

이가 난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2) 젠더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의 역할 및 성과

2021년 지역에서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분과별 회의가 조직되고 몇 차례의 모임이 이루어졌지만,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행정이나 실무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이 없고,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의도하는 바에 차이가 있음이 보여졌다고 했다.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를 가졌던 것이다. 이 젠더거버넌스 모임을 기획했던 기획자 역시 이 프로젝트의 모든 분과가 활발하게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보다는 몇몇 분과의 활동적인 모습을 통해 다른 영역에 있는 젠더거버넌스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기를 바랐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젠더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작동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역문화예술인 미투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역 예술가 활동가들은 여성운동 활동가들과 연대를 했고, 이때 문화예술계 내의 구성원들의 성평등 인식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성계가 방향성이나 전략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협업의 경험을 이루어갔다고 기억하고 있었다(심층면접 10, 15). 물론 협업은 조화의 과정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요구했던 성평등 가치를 참가자들은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은 예술가들에게도 그리고 여성운동 활동가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합의점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는 기회로 작동하기도 했다.

지역 문화예술인 미투 사건 중 몇몇 사건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진 반면에, 모든 사건들이 기대한 것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여성들이 연대해서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심층면접 10).

문화예술계와 기존의 여성운동 단체와의 협업 과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지역 내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이슈들이 나오면서 문화예술계만이 아닌 지역의 여성계와 협력하는 경험인 한편, 선미촌 재생 사업에 페미니즘 예술제 등으로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선미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의 상징성과

그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스스로가 성평등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었다(심층면접 10).

전북에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은 젠더거버넌스 성공케이스로는 선미촌 재생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젠더거버넌스 사업이라고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젠더거버넌스라고 명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젠더이슈를 다루고 있는 상황임에 대한 자각으로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제가 언제 근데 처음에는 젠더거버넌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젠더거버넌스라고 제가 이제 네이밍을 붙인 거지... (젠더거버넌스로 명명하기)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만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젠더 이슈를 다룬 게 사실이니까(심층면접 5)

젠더거버넌스의 참여에 있어서 명시적인 젠더거버넌스 플랫폼 등이 부재한 관계로 스스로의 활동을 젠더거버넌스 활동으로 이해하면서 수행하지 못한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3) 다양한 주체의 발굴 및 참여 확대 방안

젠더거버넌스의 참여자가 각 기관과 단체를 넘어서 좀 더 큰 목표와 합의를 가지고,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었고, 특히 기존 단체의 경우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심층면접 2, 3).

세대 간의 소통이나 이해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나 연대의 이상적인 모습이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세대들에서 생각하는 가족 같은 모습과 젊은 세대들의 선택적 일상과 감정의 나눔의 모습에서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매일 SNS를 통해 소통하지만,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는 관계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느끼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망과 기존 단체에서 바라는 젊은 세대의 참여의 모습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심층면접 9).

20대의 청년 활동가에게 다른 단체와의 연대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니, 스스로가 단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와 단체의 연대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연결망과 소셜 다이

닝 형태와 같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연결망을 기대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의 경우는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기보다는 나의 페미니즘이 중요한 세대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한 풀뿌리 여성운동단체들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평등전주’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소모임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심층면접 19). 다만 점조직 형태의 소모임들과 기존 단체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하거나 혹은 적당한 연대의 방식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젠더거버넌스를 상상할 때,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했던 2000년대의 모델이 아닌, 다양한 소수의 모임과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젠더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소규모 독립적인 단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기존 단체들은 가지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심층면접 1).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여성 단체들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 구성원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상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젠더거버넌스가 되게 전통적인 의미의 젠더거버넌스라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넓고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고... 근데 그 시대의 흐름 속에는 다양한 이슈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모아지고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그런 자발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단위들의 사람들과 이 (새로운) 개개인들이 뭔가 수평적인... 뭔가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소속감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 참여자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이 사람들이 소속과 별개로 이슈를 중심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또 합치고 뿔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심층면접 1)

무언가 지역 내의 이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지역 내 끈끈한 네트워크는 실제 그런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전북지역에서 풀뿌리 활동가로 스스로를 정체하고 있는 응답자는 자신이 인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다시 읽기 모임, 지역 내 비혼주의공동체 활동, 강사양성과정 교육 등을 거치면서, 지역 내의 인력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활동가의 수가 적은 상황에 대해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런 폐쇄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을 젊은 활동가는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두려움은 실제 활동에 있어서의 계획 변경 등과 같은 일을 공식적인 언급과 비공식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역의 여성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대중과의 소통의 확대와 같은 역할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도 만날 수 있었다.

지역의 여성운동이 대중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고 많은 사람이 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성운동이 그들의 직장이나 직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닿게 하는 것...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심층면접 10)

4) 전북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전북여성운동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기존 단체 중심으로만 꾸러지고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20대, 그리고 점조직으로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 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 전달을 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젠더거버넌스를 꾸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젊은 세대가 정치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역 내의 적극적인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이 참여하고, 연결되는 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면 좋을 것으로 파악했다(심층면접 14).

지역 여성계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패밀리트리를 그릴 수 있다고,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너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지역 여성운동계에서의 계파가 존재하는 문제가 그 참여자 안에서의 적극적인 통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또한 이들의 고립화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막기도 한다.

연합운동의 필요성이 높았고, 그 운영이 효과적으로 되었던 역사적 시기가 있었다면, 이후 국가에서 예산을 각각 지원받는 단체로 변화하면서 그 각각의 과업이나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연합운동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방향이나 정부 요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성운동 단체들 각각이 연합하거나 연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나 동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여성 4단체로 여성계를 대표해서 정치인들이나 지방정부와 교섭력을 가지는 단체들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역량의 성장은 실제로 각각의 단체가 개별적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만 집중하거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역량을 주력할 필요도 노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선미촌을 둘러싼 여성인권운동의 성공 경험에 대해서 전주시장을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지역 내의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이러한 성황에 대해 전북 젠더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고, 전북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미래전망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정책 방향 및 사업제안

성평등 연구사업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학교 내 성평등교육 확장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했던 응답자는 이러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조금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행정과 소통하고,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존재했다면 한다고 언급했다(심층면접 11). 기존의 단체나 기관이 있는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여성주의 안전으로 인지되어 있어, 의견수렴이 그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견이나 제안을 소통하는 방식이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목소리는 실제 정책과 연결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젠더네트워크 플랫폼의 구축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평등 이슈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들 수 있었다.

■ 정부의 여성 정책방향과 지역 여성정책의 기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명시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여성정책 방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적 변화가 이후 여성단체의 예산이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들 수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만의 변화가 아닌,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주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화가 단체별로 좀 더 크게 경험하는 곳도 있었다. 전주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선미촌 사업의 경우는 그 실험의 폭이 축소될 것을 염려했고, 적극적인 지원의 시대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심층면접 5).

실제로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성공사례로의 선미촌 사례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던 반면,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는 전북의 성매매 의제에 대한 관심의 시작점을 군산의 대명동사건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전주의 선미촌 사례만으로 한정되어 여성인권지원에 대한 논의로 지역을 다시 개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평등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이카이브 선미촌 전시관의 경우, 기억을 삭제하는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전시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누가 협력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는 기획이다. 이러한 기억의 공간 사업이 전라북도의 젠더거버넌스의 중심의제로 확장되었다면, 선미촌을 비롯한 전라북도 내의 다른 성매매 집결지였다가 지금은 그 운영을 지속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 공간과 기억의 연결을 통한 전시나 운동의 연대, 공간 재생에 대한 다양한 실험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전주시 및 행정과의 연대의 경험은 전라북도와의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어떤 도지사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은 지역정치인을 비롯한 행정을 설득할 수 있는 큰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다. 한 번의 성공의 기억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설득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 아니고, 행정과의 협업도 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전주시의 상황도 2022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성평등 의제에 대한 국가적인 분위기의 전환은 지역 젠더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타이밍 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많은 참여주체들의 자기검열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정서는 젠더거버넌스를 지속할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여성계의 행사들이나 모임들이 일회성의 만남의 자리로 소진되고, 실제 그 활동을 통해 각각의 주체들이 연대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및 적합 모델안

젠더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행정이 실제로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이 주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개입하는 방식이 선거에 의해 변화되는 행정과는 달리 지속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견이었다(심층면접 19).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구축이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주지역 중심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 심층면접에서 만난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이미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창 이슈가 되었던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에 관한 미투에 대해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문화예술계 사업 전반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점검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었어요. 고창, 전주, 전북, 완주, 익산.. 다섯 재단이. 문화재단이 공동 사업이 있어서 기본적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제시를 한거죠 성평등 이슈를.. 익산도 문화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다양성 사업을 하면 성평등 이슈나 인권 관련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접촉면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미투가 문화예술계 쪽에 굉장히 문제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슈가 됐고, 재단이 잘 대응하지 못 했어요 미온적이었고.. 그럴 때 제시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평등 관점에서 우리 지원사업이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같이 점검해보자.(심층면접 15)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를 통한 전북사회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의견에서는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기대나 평가가 아직 시작단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경험으로는 여성단체 중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위에 지부가 있는 곳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의 시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보조금 축소, 감사에 따른 압박, 사업선정에서의 탈락 등과 같은 행정을 통한 압력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여, 반성폭력 이슈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같은 사안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증언했다(심층면접 17). 다른 전북에 4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성명서 발표와 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실제로 전주지부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심층면접 3).

실제로 여전히 도시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문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촌의 경우는 자원도 부족하고, 가부장적인 문화도 더욱 공고한데 이런 농촌지역에서의 물리적인 지원·활동 공간의 확대와 성평등 의식 교육이 더욱 확장되어, 이들을 젠더거버넌스의 참여자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지역 내의 다른 여성조직과의 연대나 협업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세대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같은 지역에 있다는 그 조건 말고는 동일한 목표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젠더거버넌스의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다

양한 주민들에 대한 성인지 확대 사업 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졌다.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성별영향센터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했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추동력 있게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의견으로 제도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재의 전북의 여성단체들에게 이러한 실행력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젠더거버넌스의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것이 단체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운동 의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의 젠더전문가 양성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현재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는 젠더전문가 양성교육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장 이상적으로는 지역의 대학에 여성학 협동과정 같은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어서 여성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여성운동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심층면접 13).

젠더거버넌스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합단위를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각각의 단위들을 결합할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슈를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 단체에서는 임기직인 대표와 실무 조직 간의 관계로 인해 지속적인 결합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젠더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는 단체나 집단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특정 정치성향이나 견해가 강한 단체가 구심점의 역할을 할 때 더욱 통합적인 참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많은 여성관련 시설과 기관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그 기반을 확장함에 따라 여성단체들의 역할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일군의 여성운동단체가 국가의 영역으로 흡수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운동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이 제도화됨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운동의 자율성의 약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심층면접 3).

■ 민관합치를 위한 방안

젠더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성공조건으로 성평등 의식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성평등 워크숍을 통해 행정, 의원, 여성운동단체 등을 비롯한 각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실제로 정책 발굴 등을 통한 환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 행정이나 다른 위원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그 의견을 듣거나 혹은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었다는 의례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형식적 과정으로 느끼는 상황도 존재했다.

또한, 정치인들과의 교류나 협력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보다는 시설이나 환경 개선이나 사업 승인 등의 요청으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도 소수의 성평등 의식을 지닌 의원들을 제외하고, 성과를 위한 방문의 느낌을 받은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미래 전망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지역 의회에 여성의원들의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회와의 젠더 이슈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주요 안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 따라 여성 도의원들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 4단체는 여성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여성의원들이 참여하고, 여성단체와 여성의원들이 자주 교류하면서 여성 관련한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연대하는 것을 해보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논의가 아직 시작점에 있어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화의 여부와는 달리 젠더거버넌스를 위한 의회와의 긍정적인 방향의 시작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심충면접 3).

“확장이 필요하지만, 확장이 무섭고, 연대가 필요하지만 연대는 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말은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가족적인 유대가 아닌 서로 큰 뜻에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과정이나 방법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 내 젠더거버넌스의 성공은 누가 소속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작동해야 하고, 홍보를 통해 이

런 공간과 활동을 통해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성공 요인에 대해서 민의 역할보다는 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증언, 특히 선미촌의 성공 경험은 민관협력의 조화롭고 즉각적인 성공 과정이 아닌 2008년의 시청부서와의 협업으로 선미촌 건물 매입 예산을 올렸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실패했던 경험에 따른 새로운 대응과 민관의 협력 조화의 결과였다고 파악했다. 즉, 사회운동단체 입장에서는 항상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기보다는, 관의 호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동하였다고 인지하게 된 것이다.

네트워크의 확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방향 설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지방정부의 호응과 사업 추진의 역량 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의 노력이 어떤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는 적극적인 행정과의 연대와 협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이제 민과 관에서 저는 이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그냥 정말 5:5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6:4, 7:3도 있는데 많은 쪽에 행정 쪽. 행정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20년 동안 줄곧 선미촌 폐쇄를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현장의 실태도 계속 현장에 여성들을 지원하고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어떻게 여기를 폐쇄하고 좀 더 긍정적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할 거냐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우리도 논의하고 흐름 속에서 계속 발전해왔지만 그 입장과 방향을 분명히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행정이 그런 거를 동의하고 수용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관계로 되기 전에는 힘들었던 말이야..(심충면접 5).

선미촌에서의 성공 사례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태나 교통영역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미촌도 여성인권, 도시재생 분과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면서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지속협을 통해 건축 관련 전문가, 주거 및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순차적으로 주민 참여도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정치인도 부르고 행정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시민단체도 여성단체 다 불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을 했어요. 매번 그런데 이제 지속협에서 어느 날 아니 생태 문제나 교통 문제 다 이렇게 민간이 거버넌스 됐네 선미촌 문제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뭐 강력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해도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아니 우리만 해서는 안 되는데 남들이 함께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지속협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그 사무국끼리 모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민관거버넌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인권 문제와 성매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시작했죠... 스터디부터 스터디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민간인 허브를 발족하는 준비 모임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하자고 다 제안하고 다니고 만나서 네네 그런데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거였죠(심층면접 5).

젠더거버넌스의 성공 방식은 타 지역 젠더거버넌스의 성공사례만이 아닌 지역 내의 다른 영역 환경,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의 거버넌스 방식에서부터의 배움도 가능할 것이다.

3. 소결

심층면접 응답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전라북도 여성운동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여성단체의 어려움과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젠더거버넌스 참여에 있어서의 의지나 어려움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기존 단체의 경우는 정치, 행정 등과의 연계망을 지니고 있고 그 세력도 확장되어 있으나 국가 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의 고유 업무 등으로 거버넌스 플랫폼 등의 역할을 하기에는 자원이나 인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풀뿌리 활동가로 지역 내의 연결망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존의 운동권에서 상상하는 방식의 연대의 방식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 조직 간의 연대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성·작동하는 것이 전라북도 젠더네트워크의 과제로 나타났다.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내의 참여 경험은 무엇이 젠더거버넌스 활동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명명이나 네트워크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스스로의 활동을 젠더거버넌스 활동이라고 추후에 명명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젠더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비롯한 행정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그러한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의견이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추진력에 방점을 둔 접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에 방점을 둔 것으로, 지역 내 젠더 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려운 부분으로 상호적인 조건으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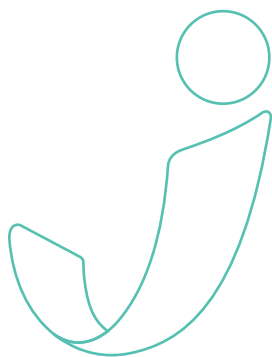
이미 여성의 의제라고 간주되는 영역을 넘어서 교육, 환경, 예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젠더거버넌스 분과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분과가 성평등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 등이 실현될 수 있는 젠더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2.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 5 장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1.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는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여성단체, 학계, 경제계, 언론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젠더거버넌스의 중요한 점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협치의 주체들이 지역 중심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기존의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여성운동 역사를 통해서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평등 의제를 소개하고, 서로를 독려하여 젠더 영역에서의 관심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기관도 있었고, 그러한 역할에 기반하여 기존의 여성단체는 물론 풀뿌리 여성운동가 그룹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타 지역의 경우에서처럼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른 관주도의 젠더거버넌스는 실제 자치단체장의 임기 이후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에 있어서는 자원과 인력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북지역의 단체는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될 것이다.



[그림 5-1]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젠더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행정의 적극적인 성평등 제도 마련 및 사업의 수행, 의회는 성평등 의식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여성단체의 여성 의제의 공론화, 학계의 지역 진단 및 방향성 제시,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와 평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와 인식 개선 등 각각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협업될 때, 젠더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협업의 과정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수행할 수 있다.

전북 젠더거버넌스 주체

행정	의회	여성단체	학계	언론	시민사회
성평등 제도 마련 성평등 사업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여성 의제 공론화	지역 진단 방향성 제시	적극적인 홍보 평가	다양한 참여 인식개선

전북 젠더거버넌스 플랫폼: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자료: 저자작성

[그림 5-2] 지역 젠더거버넌스의 주체 및 역할

각 주체들에게 기대되는 단기적, 중장기적 역할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젠더거버넌스 플랫폼의 역할은 [표 5-1] 전북 젠더거버넌스 주체별·기간별 과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축을 위해서는 각 활동에 대한 젠더거버넌스라는 큰 우산 속의 활동임에 대한 명명과 그에 대한 중장기적 사업 구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과 의회는 14개 시군을 통합할 수 있는 젠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급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단체는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여성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언론은 지역을 진단하여 현 시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는 전북 내 지역 젠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풀뿌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지역 내 여성 관련 활동 조직을 구성하고, 여성의제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 전북 젠더거버넌스 주체별·기간별 과제

주체	단기	중장기	거점형 양성센터
행정·의회	- 성별영향평가 적극 반영 - 성인지 예산	- 전북 14개 시군 행정 및 의회 젠더네트워크 구축	-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여성단체	- 여성이슈 공론화	- 사회의 다양한 영역 여성의제 발굴 - 세대 간의 소통 창구 확대	-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학계	- 지역 진단	- 여성학 협동과정 개설 - 지역내 젠더 전문가 육성	
언론	- 지역 진단 - 성인지 감수성 젠더데스크	- 지역내 성과 확산	
시민사회	- 다양한 참여	- 지역 내 성평등 인식개선 - 새로운 여성관련 활동가	- 성평등 정책 도민모니터링단 - 성평등 문화학교 - 성평등 글쓰기 및 디자인 공모전 - 청년사업 등

자료: 저자 작성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의 많은 자원과 인력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여성계 역시 동일하다. 따라서 전북 젠더거버넌스의 구성 역시 지역의 다양한 활동 주체와의 연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전북지역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나 ‘성평등 정책 도민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등을 통해 14개 시군의 행정, 의회, 그리고 풀뿌리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기대한다. 모든 시군이 동시에 전북 젠더거버넌스에 합류하는 방식이 아닌,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젠더네트워크는 ① 여성친화도시(익산, 남원, 고창, 김제)간 협력체계 구축, ② 여성단체내의 광역기초네트워크와 협업하는 방안 (지역여성단체연합, 여성경제인협회 등), ③ 청년, 여성, 귀농귀촌 등 자발적 커뮤니티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전주, 남원, 완주 등)의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고, 풀뿌리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연결 자원들이 합류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간 협력모델	여성단체 기초단체 협력망	청년, 여성 커뮤니티 활동지역
익산, 김제, 고창, 남원	여성단체협의회 14개 시군 YWCA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완주, 전주, 남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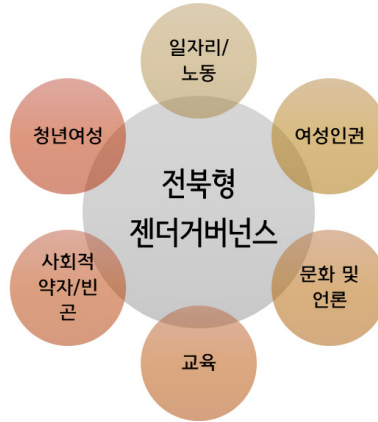
자료: 저자작성

[그림 5-3]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초지자체 네트워크 가능성(안)

특히, 전북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관에서 각각의 노력이 요청되는데 관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예산확보 및 조직 구성 체계를 구축하고, 민에서는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바탕으로 광역형 젠더거버넌스 사업의 확대의 장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북 14개 시군의 네트워크 확대 및 성평등 정책 활성화의 핵심 사업의 확장은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이다.

광역형의 분과별 네트워크와 시군과의 협의체를 통한 기초형 네트워크의 협력체제는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전북 전역의 여성의 권익향상,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여,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확대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확보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젠더네트워크의 분과는 전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준비위원회의 회의(2021. 11. 18)의 안을 기본으로 하여, ① 일자리/노동, ② 여성인권, ③ 문화 및 언론, ④ 교육, ⑤ 사회적 빈곤 및 약자, ⑥ 청년여성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분과별 회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차후에 분과 영역을 조정하여 분야별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자료: 전북 젠더거버넌스 구축 준비위원회 회의자료(21.11.18)

[그림 5-4]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광역형 분과별 네트워크 모델안

분과별 네트워크 모델안은 작동되지 않고 있지만,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의 중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지정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센터는 “성평등 가치가 실현된 전북”을 비전으로 전북지역의 성 주류화 제도 지원 및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주류화제도 지원

전북 지역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

·성평등 정책 도입 모니터링단 운영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사업·
- 성평등 글쓰기 및 디자인 공모전·
-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 성평등 문화학교·
- 성평등 영화제·
-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청년공감대제고사업

- 청년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청년 릴레이 집담회
- 지역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 지역 성평등 프로젝트 협력사업

자료: 저자작성

[그림 5-5] 2023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주요사업안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사업은 성 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의식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모니터링 사업, 청년 공감대 제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여성가족부의 청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층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성 주류화 제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전북지역 성 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 성 주류화 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성 주류화 제도 실행 주체들 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력과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4차년도의 사업을 완결하게 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통합적인 협의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협의체는 전라북도와 시·군의 성 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담당 팀장 및 주무관 등의 행정 영역과, 지역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여성단체까지 확대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표 5-2] 전북지역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안)

년도	지역
1차년도(2022년)	익산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2차년도(2023년)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임실군
3차년도(2024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4차년도(2025년)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자료: 2023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내부자료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양성평등센터가 역할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전라북도 내의 작동가능한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여성 의제의 발굴 및 제언, 환류 등의 과정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에는 6개의 다양한 사업이 수행 예정인데,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사업에는 지역의 성평등 강사진을 발굴하는 과정과 동시에 수행되어 문화조성과 지역내 강사진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성평등 글쓰기 및 디자인 공모전,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성평등 문화학교, 성평등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역 내 양성평등 관련 교육 및

문화 경험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바탕으로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의 경우는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 단체와 협업을 통해 최근의 미투운동의 경험으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기존에 주요 여성의제로 간주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변화의 노력, 즉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양평센터의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협업은 이러한 분과별 젠더거버넌스 성장의 기반 마련의 기회로 작동할 것이다.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은 실질적인 성평등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 및 점검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모니터링 단원 모집이 시군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시군의 주민에 대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고, 도민의 정책적 역량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도민 모니터링단은 '성 주류화 네트워크 사업'의 지역과 동일하게 익산시,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으로, 양평센터는 한편으로는 의회와 행정의 네트워크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주민과의 연결망을 만드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2022).

청년공감대 제고 사업으로 수행되는 청년 소통 네트워크 구축, 청년 릴레이 집담회,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단, 전북 성평등 프로젝트 협력사업 등도 젠더거버넌스의 분과별 활동을 청년 영역에서 수행해보려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표 5-3] 2023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사업계획(안)

범주	사업	사업 특징
성주류화 제도 지원	전북지역 성주류화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지역 성주류화 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성주류화 제도 실행 주체들 간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인지력과 성평등 의식 제고로 성 평등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

[표 계속] 2023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사업계획(안)

범주	사업	사업 특징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공공기관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인식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 ·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여건 형성 및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성평등 글쓰기 및 디자인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제 발굴 · 도민의 성인지각수성을 키우고 확산에 기여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생애 구술사 기록 과정을 통한 세대 간 소통 및 성평등 문화 공유 기회 확대 · 전라북도 여성의 역사와 생활문화 등 구술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기록할 수 있는 구술 기록전문가 양성 · 기록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북 여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전북 여성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생애 구술사 아카이빙 구축의 토대 마련
	성평등 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이론과 실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문화 강좌를 통해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세대·젠더 간 성평등 가치의 공감대 확산
	성평등 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성평등한 영화와 영화인 발굴 및 지원 · 성평등 문화 경험을 향유하여 시민 역량 강화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 내 여성주의 예술비평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및 지역 주체 발굴 ·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여 쟁점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지역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정책 도민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실행 주체의 참여 확대 가능성 강화 · 도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 환경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

[표 계속] 2023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사업계획(안)

범주	사업	사업 특징
청년공감대 제고 사업	청년 소통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청년 성평등 의제 발굴을 위한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체 구성 · 청년 지역 정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환류체계 마련 · 지역 청년사업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소통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청년 릴레이 집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 의제에 대한 청년 간 소통 기회 마련하여 연대 강화 · 청년 시각에서 젠더 관련 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개선 의견 도출 및 성평등한 문화 정착 · 청년공감대 제고 사업의 환류를 통한 청년사업 활성화
	전북 청년 성평등 모니터링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청년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 ·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
	전북 성평등 프로젝트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주거, 일자리, 복지, 참여·권리, 귀농·귀촌 등의 분야 내 청년 성평등 의제 발굴 및 문제 해결 실험 · 문제 해결 실험을 바탕으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개선안 도출 · 청년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지역의 활력을 일으키고, 지역과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도전 가능성 확대

자료: 2023년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내부자료

전라북도 지역에서의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은 민관의 협력 및 젠더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부재 등의 문제로 젠더거버넌스 구성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반면, 실질적인 지속이 이루어지지 어려웠던 전북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기구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전북 14개 시군에 대한 순차적인 접근의 계획은 기존의 전북 젠더거버넌스가 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과는 달리 시군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젠더거버넌스의 확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지역 여성사/기록의 필요성

지역 내에서 완결된 젠더거버넌스를 기대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젠더거버넌스의 구성과 변화를 주목하지 못하는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젠더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이나 활동을 추적하고, 작은 변화의 경험에 대한 기록의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기록물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부여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통해서 전라북도 젠더거버넌스 역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정표들의 구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훈련, 선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여성 전주시의원, 이후에 도의원 등의 여성 정치인 발굴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선미촌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도시재생, 여성인권의 민관거버넌스 성공 사례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 내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일들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관점의 적극적인 해석은 심층면접 당시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지역 내 젠더거버넌스의 약화 혹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다른 긍정적인 방향의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 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비판적인 시선의 많은 자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 여성사의 발굴은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성운동, 사건, 갈등의 해소 등이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의제의 발굴 및 그 해소 방안의 특성도 나올 수 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전북지역의 정치인들의 활동지역, 기간, 학창시절, 혹은 이후 운동 과정에서의 연관 등으로 나름의 공고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결망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젠더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도움을 혹은 방해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고민과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 지역 내 대학의 여성학 협동과정의 설치

전라북도 지역 청년층의 젠더에 관한 관심과 그 활동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내의 동아리 모임이나 독서 모임, <성평등전주>에서 진행했던 성평등 생활 연구모임, 리빙랩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 지원 사업 등의 활동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전에는 전주지역의 비혼 네트워크 비비의 공간, 공간 안에서의 여성학 강의 등을 통해 지역 내의 성평등 강사 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여성학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다양한 활동에 더하여, 좀 더 전문적으로 여성학을 전공하고, 그 문제의식을 키워 석(박)사과정을 마친 뒤에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구자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의 여성젠더학과와 같은 대학원 협동과정 등의 개설은 지역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여성·젠더학 전문가의 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내 젠더자문관·전담인력 지정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반영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비롯하여, 민, 관, 학계, 언론, 시민사회까지를 포괄하는 젠더거버넌스의 효과적인 수행과 그 확산을 위해, 행정과 입법기관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 시점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서울과 경기의 젠더 자문관, 대전 성인지정책 담당관, 제주 성평등정책관 등의 조직 같이 성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 실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정책들의 성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역 내 성평등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정 분야의 전문가의 존재는 성평등 추진체계의 효과적 작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의 교육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도 교육이 아동청소년기의 학창시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단순히 직업교육만이 아닌 변화하는 세상을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배운 세상 전면적으로 다른 기술적 진보와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다른 세대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세대별 소통을 위한 소통교육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교육만이 아닌,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현아. (2013). 광주광역시 성 주류화 정책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김경희 외. (2009).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성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 외. (201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V): 사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과제분석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신. (2017).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광주지역 여성단체 활동 강화 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김혜경. (2022).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8권 1호
- 나성은·황은정. (2018). "서울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운용'으로 본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머니투데이. 2017.02.10. "서울시 '공급자 중심→시민소통형' 복지제도 전면개편 첫발 뚫다"
- 박연정. (2019). 선미촌 도시재생의 특징 - 거버넌스 활동과 '경계 허물기'를 중심으로. 2019 전주선미촌민관협의회 집담회 선미촌 도시재생의 현재와 향후 방향.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 박주은 외. (2019). 인천형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서난이. (2019).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돌아보기와 향후 방향. 2019 전주선미촌민관협의회 집담회 선미촌 도시재생의 현재와 향후 방향.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 송경숙, 김미선, 우정희, 최장미 & 바라. (2021).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20년의 기록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안영훈. (2009).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태운. (2020).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 172호
- 오민지·안선민. (2022).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34권 제 1호
- 원숙연. (2011).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논집. 제28권 제2호
- 원숙연·박진경. (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4)
- 이갑숙·안정선. (2013).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디지털정책연구 11(5)
- 임현정. (2020). “부산지역 젠더거버넌스의 역할과 영향”. 2020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임혜경. (2018). “광역자치단체 정책거버넌스의 효과적 운영 방안: 경기도 젠더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2022). 2022 성평등 정책 도민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보고서.
-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2).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 전정희. (2011).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2011 제 3차 전북여성정책포럼, 지역거버넌스 주체로서 여성단체의 역할과 전망 토론문
- 조경옥 & 임지원. (2014). 2014 전북 전북여성정책포럼 최종보고서. 전북발전연구원
- 최유진. (2022). “정치사회적 변화와 전북 지역 성 평등 정책 방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2022 성평등 추진전략사업 포럼: 정치사회적 변화와 지역성평등정책의 방향 주제발표문
- 한정원 외. (2008),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명숙, 조경옥 & 서은영. (2009). 2009 전북여성정책포럼. 전북발전연구원
- Rhodes, R. A.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 Woodward Alison. (2004). “Building Velvet Triangles: Gender and Informal Governance” edited by Thomas Christiansen and Simona Piattoni. Informal Governace in the European Union. Edward Elgar Publishing

SUMMARY

Designing Gender Governance in Jeonbuk: Development of a Framework and Strategies

Heejin Jun · Juyeon Lee · Ahram Jeon · Jihoon Choi

As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dvances, the role of governance that reflects the local situation and the demands of local residen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particular, Jeollabuk-do has a high population mobility rate among young women and a low gender equality index in terms of female representation and other indicators.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spread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in Jeollabuk-do and promote the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As a result, toda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ender governance are being emphasized more tha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ender governanc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a foundation for equal rights in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ety fo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women, in terms of their status, capacity enhancement, and decision-maki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conditions of gender governance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Jeollabuk-do and seeks to identify potential beneficial factors for gender governance in the region through an analysis of successful case studie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21 members of gender governance, as well as gathering expert opinions on appropriate gender governance approaches within the region. The in-depth interviews focused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with gender governance, their future perspectives, their evaluations of the

women's movement in Jeollabuk-do, and their ideas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ddition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presentatives who provided insights into the future of the women's movement in Jeollabuk-do,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women's issues, and grassroots youth activists from various fields to gather diverse opinions.

The tasks identified for activating gender governance in Jeollabuk-do through in-depth interviews are 1) identifying and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interests; 2) operating a gender governance platform; 3) promoting cooperation among gender governance members, including women's groups and administration; and 4) expanding activities beyond areas traditionally considered women's domains through the engagement of diverse sectors of society. Respondents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fforts by the administration,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programs, revising local regulations in line with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the legislature, and promoting public discourse on women's issues by women's organizations. Additionally, academia can contribute by diagnosing local issues and suggest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while the media can help promote and evaluate gender governance. Finally, effective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from various sectors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ose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interests in women's issues, is also essential.

The Jeonbuk Gender Equality Center, as a hub, is expec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collaboration and expand the activities of the local women's movement in Jeonju to the 14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buk-do. The center will also connect the grassroots networks within the region through the discovery of young generations.

Finally, four suggestions can be made for activating gender governance in Jeollabuk-do. Firstly, there is a need to create opportunities to actively interpret local

activities by accumulating local women's history and records. Secondly,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in women's studies at local universities, it is possible to train women and gender experts who share a sense of problem awareness in the region, while also creating a demand for a graduate program in women's studi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der consultation proces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within the province by appointing gender advisory staff withi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agenc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education on perspectives regarding the changing sensitivities of gender and society across generations and, promote a view of society through a gender equality lens.

Key Words

gender governance, gender equality, female representation, women's movemen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gender governance platform, Jeollabuk Gender Equality Center, grassroots networks, women's history, women's studies, gender advisory staff, gender consultation, gender equality lens.

기본연구 2023-05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발행인 | 김보국

발행일 | 2023년 4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78-7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